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설 연휴 전복권 고속도로 '혼잡'

설 당일 귀경길 전주 → 서울 최대 7시간 50분 도공 전복 "전년보다 20% 증가한 일평균 34만대" 교통 분산 위해 승용차 전용 임시갓길차로 운영

설 연휴 기간 전복권 고속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설 연휴 기간 전복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일평균 34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11일 밝혔다.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이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에는 하루 46만대가 이동해 연휴 기간 중 가장 극심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같은 날(32만대)보다 43.2% 증가한 수치다. 서울→전주 구간의 경우 귀경길은 15일에 최대 4시간 30분,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에 최대 7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귀경은 10분, 귀경은 40분 증가한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교통 분산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서해안선과 통영대전선 일부 구간에 '승용차 전용 임시갓길차로'를 운영한다. 또한 모든 휴게소에서 직원용 화장실을 일반 이용객에게 개방하고, 관촌임시휴게소(완주방향) 등 3개소에 임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짧은 연휴로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2시간 이상 운전할 경우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민주 전북도지사 경선 관련선거 시비 등 파문 확산되나

'지지를 상승' 이원택 의원 향한 특정후보 지지층들의 비방 가열... 선관위 조사 착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 지지율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사진)을 향한 특정후보 지지층들의 노골화된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여부 및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향후 결과에 따라 관련 선거 시비를 비롯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지지도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산하단체 민간위탁 업체 간부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는 물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일부 카톡방을 활용 자신의 입장을 게재하면서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상 저촉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전북선관위와 전북도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북도 소유 산하기관 민간위탁업체 간부가 카톡방을 이용한 비방행위를 했다는 의혹들이 접수돼 선관위 조사과로 이첩해 공직선거법 선거법 저촉을 비롯한 후색선전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것이다. 전북도 역시 사실을 접수하고 공직선거법상 시비비위를 가리지 않고 민간위탁업체 간부를 대상으로 자체를 요청해 해당 간부로부터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전북선관위는 산하단체 지분이 전북도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것



전통시장 장보기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11일 전주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전통시장 정보기를 하고 있다.

을 감안, 민간위탁업체 종사원들의 특정후보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문제의 해당 간부는 한 카톡방에 글을 게재하면서 이 의원을 향해 '30년 실재'의 설계자는 누구인가를 제기하면서 짤방리 파행에 책임있다'는 식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를 사용,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서슴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당 간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인물이 민간위탁 분야 근무하고 있는 전북도 산하기관 윤리현장을 보면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 산하단체 민간위탁업체 종사원의 공직선거법 여부를 떠나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한 상대측 후보 후색선전 비난행위 등 이같은 사실 게재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게 상당수 도민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허위사실로 전북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없이 흠집내기식으로 유포되는 주장들은 정책과 비전을 평가할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모씨(전주시 완산구 효자동)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지를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특정후보에 대한 후색선전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위로 전북의 화합과 발전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북도 산하단체 민간위탁업체 간부의 이러한 행위는 자칫 특정인을 향한 사전선거운동을 이어질 우려가 높은만큼 자체하고 선관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허위사실과 왜곡된 공격으로는 전북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 미래를 만들 수 없으며 전북을 이끌 힘은 흠집내기가 아니라 검증과 성과와 분명한 비전에서 나온다"며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 구입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 환급

도내 20개 전통시장, 정부 '설 명절 환급행사' 참여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환급행사'에 도내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소비 촉진 행사다. 행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5일간이다.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즉시 온누리상품권

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씩,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전북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에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공설시장 등 12개 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에 전주 남부시장, 전주 서부시장 등 8개 시장이 참여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스마트공장, '양'에서 'AI 질적 혁신'으로 대전환

2년간 133개 기업 지원, 생산성 76% 증가... 도, AI 시범공장 조성 등 질적 고도화 주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양적 성장을 넘어 AI 기반 질적 혁신으로 전환한다. 지난 2년간 133개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전북은 올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 AI 시범공장 조성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I)을 본격화한다.

11일 도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133개 제조기업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며 현장 혁신을 지원했다. 30명의 전문멘토가 기업 현장에 6~8주간 상주하며 2,142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98%에 해당하는 1,986건을 즉각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올해

부터 스마트공장의 '질적 고도화'에 주력한다. 핵심은 AI 시범공장 조성이다. 농생명과 기계부품 등 도내 주력 산업 분야에서 시범공장을 선정해 AI·로봇 기반 지능형 공정을 실증한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환경 기반 데이터 관리 인프라도 구축한다. AI 시범공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전북형 스마트제조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 AI 기술을 검증하고,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기업이 선택하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공정시스템 구축, 현장혁신 등을 통합한 패키지형 종합지원으로 전환해 지원 효율성과 기업 체감도를 높인다. 시스템 활용도가 낮은 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디지털 전환 역량 내재화를 지원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